보도자료

what through

보도시점 2024. 1. 30.(화) 배포 2024. 1. 30.(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5개년) 종합계획 첫 수립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2028년까지 추진
-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30(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재외동포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
 - 정부위원(외교부·재외동포청·국조실·기재부·교육부·법무부 11개 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12명 위촉, 임기: 2024.1~2025.12)으로 구성
 - o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 재외동포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23.12.1, 위원장 재외동포청장)와 공개 토론회('23.12.8.) 등을 개최하여 국내·외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 □ 이번 기본계획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 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②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③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④한인 네트워크 구축, ⑤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 하는 동포정책을 수립하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동포 거주국에 알리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해 우리나라와 동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한인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유지를 돕는다.

- 또한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동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을 시현한다.
- 동포사회와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도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 면리한 동포생활을 위해 해외에서의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디지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재외동포청은 제1차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범정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올해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정책을 처음 수립한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며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 주요 내용

담당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장	최윤선	(032)585-3154
	재외동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인재서	(032)585-3156

참고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추진배경

- ◇ 국정과제「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에 따라, '23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9.), 재외동포청 출범(6.5.)에 이어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 외교부・법무부 등 20여 개 부처・기관 참여, **범정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동포정책 수립 요구 증가

- 글로벌 현안 대응에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적 자산이자 경쟁력
- 대한민국 동포사회 간 상생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포괄적 접근 필요

- 한인 정체성 약화, 세대 간 단절, 국내동포 증가 등 새로운 이슈 대응
- 글로벌 위기와 거주국별 상이한 동포사회 요구에 맞춤 대응

□ 재외동포정책 공감대 확보 필요

- 동포정책 지지는 동포 모국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동력
-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보가 주요 과제

Ш

비전 및 정책목표

미션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비 전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

정책목표

- ①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 ②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 ③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ㆍ지원 강화
- ④ 한인 네트워크 구축
- ⑤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다양한 정책 수요를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제반 지침 등에 반영

□ 범정부 협업 및 의견수렴 활성화

- 범정부 정책 협의를 강화해 부처 간 협력과 실질 현안 논의 강화
- 동포간담회,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정책 반영

②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 재외동포 교육 강화

- 한글학교 운영비^{*}를 대폭 증액해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업 컨설 팅과 온라인 학위 과정을 제공하여 교수 역량 강화
 - *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 '23년 140억원 → '28년 190억원 목표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터디코리안 운영 개선 및 교육자료 확대
- 한국학교를 통한 정규 교육 강화^{*} 및 문화원의 한국어 교육 확대 *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교원 역량 강화, 저소득 자녀 수강료 지원 확대 등

□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

-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23년1,500 → '28년6,000명 확대 목표
-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사후관리를 강화해 동포인재와 지속 교류·협력
- 차세대 동포 국정 참여기구 '글로벌 차세대 동포 위원회^(가칭)' 신설

□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

-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재외동포에게 교육하여 한인 정체성 함양
-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

③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ㆍ지원 강화

□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 장기적으로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추진
 -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및 홍보 강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등을 통한 제도의 유연한 적용 방안 모색
-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지역 확대 추진
- 해외 입양인 국적 부여를 위한 미국 「입양인시민권법」 제정 측면 지원, 국외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취약동포 보듬기

-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을 위한 제도·기금 마련
- 사할린, 고려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정책 정비
- 무국적 동포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 원폭피해, 사할린, 고려인 등 소외동포 모국 방문 및 기념행사 추진
- 베트남 등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의 생활 및 보건의료 지원 확대

□ 국내동포 지원

- 출입국·체류 편의를 위해 안내·설명 강화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토탈 케어시스템 구축
- 동포 거주 밀집지역 지자체 등과 협업해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실수요 조사 및 지원방향 모색
-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 수록 추진

□ 편리한 동포 생활

- 해외 민원 서비스 절차 간소화 및 온라인 제공 민원 범위 확대
-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하고 간편한 신원확인 방법을 제공하여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편리한 이용을 지원
-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등록기간(90일) 경과 후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적 상실자에게도 재외국민등본(말소자용) 발급 허용

④ 한인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

-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기존 교류·협력 사업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내실화하고, 환경·사회 변화에 발맞춰 양질의 신규 사업 발굴
- 과학자, 법률가, 경제인, 여성 등 전문가 대회 적극 지원
- 지역별 핵심 차세대 단체 발굴 및 육성 등 주류사회 진출 지원
 - 우수 동포를 국가인재로 관리해 정부 주요직위 등 인선 기회 제공

□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국내외 순환 개최, 프로그램 개편, 참여업종 다변화 등을 통해 실질적 판로개척 지원과 대회 내실화 노력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 설치, 비즈니스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영비즈니스포럼 내실화, 창업무역스쿨 운영 등 차세대 경제인 육성
-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⑤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재외동포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협력
- 재외동포의 공공외교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주요 시책에 동포가 주요 참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연대 강화

□ 글로벌 가치 선도에 기여

- 지구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편적 해결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도입
-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문화행사 및 홍보 추진